

지난해 10대 환경뉴스 선정

지난해는 올해의 대통령 및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가 환경 문제에 도 그대로 투영된 한 해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비경제성과 갯벌파괴, 수질오염 가능성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5월 사업강행을 결정했다.

반면 맑은 수돗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3대강 특별법과 난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기본법 등이 제정된 것은 환경정책이 진일보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다음은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지난해 10대 환경뉴스.

1)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는 지난해 5월 25일 국민의 83%가 반대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키로 했다.

농림부의 집단 이기주의와 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추진된 새만금 사업은 그러나 사업강행 결정이 난지 100일도 지나지 않아 농림부가 쌀재고 누적과 2004년 쌀 수입 대체가 불가피하다며 쌀생산 정책을 포기해 주목됐다.

2) 난개발로 치달는 동강

생태계 보전에 대한 염원으로 국민이 지켜낸 동강이 심하게 파괴되고 있다.

강변을 따라 콘크리트 옹벽과 아스팔트 도로가 건설되고 대형버스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생겼으며 민박집과 레프팅 업체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으나 환경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 3대강 특별법 제정

오염총량 관리제와 하천 인접지역의 오염원 관리강화 등 수질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수계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상하류간 참여한 갈등으로 법제정 자체가 불투명했던 3대강 특별법은 22개 시민환경단체의 국회입법 감시활동 등 적극적인 참여로 커다란 결실을 보았다.

4) 미국없는 교토의정서 합의

지구온난화의 최대 주범인 미국이 빠졌지만 세계는 교토의정서를 되살려냈다.

전세계 온실가스의 25%를 배출하는 미국이 자국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거부한 것이 지구생명과 미래세대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진 가운데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5) 광우병 파동

1986년 영국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광우병이 유럽 전역에서 발생하는데 이어 9월에는 일본에서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

인간의 육식을 채우기 위해 채식동물인 소에게 육골분을 먹여 이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던 병이 소에게 발생했고 결국은 그 화살이 인간을 향하고 있다.

6) 매항리 소음피해소송 승소

매항리에서 자행된 50년간의 폭격과 13년간에 걸친 주민들의 투쟁이 지난해 4월 작은 성과를 거뒀다.

서울민사지법은 1심에서 미공군 폭격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 중 6명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8명에 대해서는 900만원씩 총 1억3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7) 난지도 골프장 강행

난지도는 비위생 단순 매립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끊임없이 신음하고 있다. 매립지 전구간에 걸쳐 인체에 치명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의 발암물질이 나타나고 있는 이곳에서 서울시는 골프장 건설을 강행기로 해 환경단체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8) 북한산에 관통도로

환경부가 지난해 7월 12일 북한산은 물론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는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구간 25.3km에 대해 공사를 허용했다.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대미

문의 환경과피적 사업이다.

9) 수도물 바이러스 검출

지난해 5월 환경부는 원수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정수장의 정수된 물과 수도꼭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도물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 준 첫번째 사건으로 국내 정수장 시스템과 수도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됐다.

10) 대규모 신규댐 건설

가뭄이 한창이던 지난해 봄 건교부는 가뭄을 핑계로 28개의 댐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가뭄대책이라며 발표한 댐이 물을 공급하겠다는 지역(도시)은 가뭄 피해지역(농촌)이 아닌데다 도시지역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수위를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공급능력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15개지역 주민들과 20여개 시민단체는 댐반대 국민행동을 조직, 댐 중심의 물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 부여

- 현 TV나 냉장고 등은 판매자가 가져가야

앞으로 폐기물은 그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회수해서 처리해야 하고, 제품의 판매자도 폐기물을 회수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서 1회용품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손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가 크게 강화되는 한편,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도록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초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이 2003년부터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정책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환경시설 확충

경기북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오는 2005년까지 1조원 가량의 투입된다.

경기도 제2청은 임진강·한탄강등 경기북부지역 주요 하천의 수질정화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9천858억원을 들여 10개 시·군에 4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수계별로는 동두천·파주·양주 등 임진강 수계 5개 시·군에 4천915억원을 투입해 2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고 남양주·구리 등 한강수계 3개 시·군에 4천23억원, 가평·남양주

등 북한강수계에 920억원을 투자해 각 11개소와 14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설이 마무리되는 2005년에는 경기북부지역에 하수처리장 49개소, 분뇨처리장 16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0개소, 공단폐수처리장 5개소로 늘어나게 되며 하수처리율 또한 현 75%에서 95%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개선

서울시는 지난 12월 6일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이 2008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12월연말부터 2007년까지 4개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약 5천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수처리장별 기존 시설 개량방안과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실시계획을 거쳐 2004년 착공, 2007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현재 시내 4개 하수처리장(시설용량 하루 581만t)의 방류수질은 BOD가 10~17PPM(법정기준 20PPM이하), 부유물질(SS)은 4~11PPM(기준 20PPM이하), 총질소(T-N) 11~25PPM(기준 60PPM이하) 등으로 기준보다 낮지만 지난 10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는 BOD와 부유물질 10PPM이하, 총질소 20PPM이하 등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안산·시흥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는 지난 12월 7일 반월·시화공단의 대기오염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신도시 지역에 각각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2억5천만원을 들여 올해말까지 고잔신도시 2단계지역 안에 대기오염 상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측정소를 설치, 대기환경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측정치를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 측정소는 아황산 일산화탄소 질소 오존 등 오염물질의 농도와 함께 온도 습도 풍량 일사량 등을 측정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시(市)는 앞서 본오동, 원곡동, 부곡동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설치한 바 있고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대부도에도 자동측정소 설치작업을 진행중이다.

시흥시도 올 연말까지 대야동사무소 옥상에 2억원을 들여 질소 오존 등 4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배출업소 환경단속권 지자체에 위임

전국 산업단지내 오페수 배출업체의 관리권한이 올 7월부터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4일 산업단지는 지방환경청이,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맡도록 돼있는 배출업체의 관리체계를 개선, 산업단지 내외의 구분없이 모든 배출업체 관리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대기·수질 환경보전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관리권한은 지자체로 넘기지만 배출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상수원과 상습 위반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기동 점검을 벌여 중앙정부 차원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파견인력에 의존하는 4대강 환경감시대를 정규 조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환경사법경찰의 기능을 부여해 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 등에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는 모든 환경범죄를 전담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환경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4대강 환경감시대에 감독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편 민간환경단체 등 일부에서는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경우 대부분이 환경보전보다 지역개발을 우선시키고 있는데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지역적 연고 등으로 배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엄격한 법집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행정학회도 지난해 6월 자치단체의 환경규제의 지도 능력이 미흡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역할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관리업무를 개선하는 것이며 권한을 완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도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계속되는 가뭄으로 한강수질이 갈수록 악화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한강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오염총량관리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환경부 수질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2월 2일 "한강수역에 있는 양평, 용인, 남양주, 광주 등 경기도 4개 시·군이 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합의하고 이미 용역을 준 상태"라며 "이천도 곧 참여하면 올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계 구간별로 오염물질 부하량을 통제해 수질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3대 수계특별법에 따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에서는 의무로 실시될 예정이나 한강만은 임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애초 98년 8월 한강법을 만드는 과정에 서울시 주도로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개발제한과 규제 등을 이유로 한강 상류 지자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전면시행을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한강 상류 지자체들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오염총량관리제에 참여하는 대신 다른 부문에서의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속된 가뭄으로 팔당댐의 방류량이 지난해 9월보다 44% 줄어들면서 구리와 암사, 잠실, 노량진, 가양 등 팔당하류 지점의 수질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1.3-2.2ppm으로 9월에 비해 0.2-0.5ppm 증가하는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유럽환경마크 인증시험 국내서 실시

산업자원부는 섬유류의 환경마크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 전담기구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설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마크(Eco-label)는 유럽국가들이 제창한 환경규제로, 섬유류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마크의 종류는 현재 독일표준협회 부속기구에서 제정한 딘 서트코(Din Certco), 에코텍스 스탠더드 등 20여개 종류에 달한다.

환경부담금 징수율 높여

환경부는 환경관련부담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구 등 일선 징수기관의 전산인프라를 대폭 개체기로 했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7년까지 87%을 웃돌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98년 이후 83%대로 낮아지는 등 체납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환경관련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연체할 경우 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시켜 신용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시·군·구 등 일선 징수기관의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전산시스템등 관련 인프라를 개체하고 행정관리비 등을 증액지원해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환경관련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오염물질 배출부담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5가지이며 공장 및 주택을 제외한 160㎡ 이상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환경오염업체 1천599개 적발

지난해 9월과 10월 전국 2만6천424개의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체

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6.1%인 1천599개의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지난 11월 28일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이중 663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302개), 조업정지(125개), 사용중지(303개), 폐쇄명령(210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들 업체의 위반 내역을 보면 ▲무허가 550개 ▲배출허용 기준초과 315개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19개 ▲기타 615개 등이다.

금호석유화학(주), (주)태일금속, 로디아실리카코리아(주) 등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무허가 상태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됐다.

환경부는 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주)중근당과 하이트주조(주), 효성(주), 동림제지(주) 등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병과했다.

환경부, 슬러지처리장 9곳 건설

수원, 대구, 전남광역 등 전국 9개 시·군에 총 1천738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전용처리장이 오는 2004년까지 설치된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등 유기성오니를 별도의 공정을 거쳐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소각·퇴비화시설을 전국 9개 시·군 지역에 신설키로 하고 올해부터 사업별 타당성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하수슬러지의 대부분을 매립방식을 통해 처리해 왔으나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으로 오는 2003년 7월부터 유기성오니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슬러지를 소각하거나 퇴비화 하는 전용처리장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 대구, 전남광역 등 전국 9개 시·군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설사업에 착수키로 하고 오는 2004년까지 국비 1천377억원을 포함 총 2천2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슬러지 처리시설의 경우 처리방법에 따라 시설설치비 및 운영·관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타당성조사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민자제안 등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칭 전남환경(주)의 민간제안으로 추진중인 전남광역처리장은 하루처리용량 600톤 규모로 올 1~2월 제3차 제안공고 및 실시협약체결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2003년까지 완공하는데 총 7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지역에는 포항, 경산, 안동 등 3곳에 하루처리 100톤 규모의 슬러지 처리장 건설을 추진중인데 지역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민자유치를 검토 중이며 2003년까지 총 4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남지역의 경우 마산, 진주, 고성 등 3곳을 전용처리장 시범설치지역으로 선정, 올해부터 2003년까지 총 462억원을 들여 하루처리 8~200톤 규모의 소각·퇴비화시설을 각각 건설키로 했다.

하수도 처리비 지역별 최대 4배 차이

- 부산 m³당 203원 최고...
안성은 보급률 0.2% 불과

하수도 처리요금이 지역별로 최고 4배까지 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가 발행한 '2000년 주요도시 비교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요도시별 하수도 요금은 부산이 m³당 203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요금은 의왕과 군포의 각각 51원에 비해 무려 4배가 높은 금액이다.

부산을 비롯해 대구(161원), 광주(157원), 안양(148원), 대전(144원), 제주(140원) 등이 비교적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반면 남양주(53원), 하남(54원), 고양(55원), 창원(63원) 등은 처리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보급률에서는 군포가 99.18%

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안양과 평택(각각 98.84%), 서울(98.62%), 광명(97.7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성(0.17%), 파주(0.23%), 김포(0.51%) 등은 1% 이하의 극히 저조한 하수도 보급률을 기록했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추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을 간소화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관련기관간 협의·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절차과정의 복잡성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별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자 회의를 통해 현행 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종합 검토,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개선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45일로 되어 있는 법정 협의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조사항목에 대한 평가기간도 사업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지역환경기관이 개발사업지구

대해 기초사한 항목이 있을 경우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조사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대신 사업유형별 평가서의 세부평가지침을 마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능을 높이고 자연경관 및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경우 특별심사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키로 했다.

축분 분리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 오수분야 설계·시공업 단일화

앞으로 축산업체는 가축 배설물 가운데 축분을 따로 분리, 저장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현재 이원화된 오수분야 설계·시공업이 단일업종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했다고 지난 11월 19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우선 축산폐수에 의한 하천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업자가 발생된 배설물 중 축분을 분리 저장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이 조항은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중인 낙동강법에 반영돼 있으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분뇨처리시설과 오수 또는 축산폐수시설 등으로 이원화 돼 있는 오수분야의 설계·시

공업을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으로 단일화해 관련업계의 기술인력 등 이중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 받은 후 적합 통보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해 불허에 따른 손실을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 등 현지성이 강한 13개 관련업무를 국가나 시·도에서 시·도나 시·군·구로 이관시키도록 했다.

환경관련 허가서 인터넷 배포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업 관련 표준허가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인청은 소규모 영세기업 등 환경관련법을 처음 접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민원인의 경우 각종 허가신청서류 작성을 대행업체 용역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사업자의 경비절감차원에서 신청서 작성요령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허가신청서는 수도권관내 4천 256개 배출업소중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도급업, 도장 및 피막처리업, 목재가공업, 비철금속제조업 등 8개 업종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감염

성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등 총 11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경인청은 작성사례집의 인터넷 공개로 허가서류 작성비용(약 200만원/건) 절감, 불필요한 방지시설의 설계 지양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방지시설 설계·시공분야 전문가들에게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폐수 10%줄이기 추진

울산시는 폐수처리비 절감과 하천수질오염 감소를 위해 올해부터 폐수 10% 줄이기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12월 10일 밝혔다.

주요 추진 목표는 1~3종 90개 대상 업소에서 발생하는 1일 27만276㎡의 산업폐수를 1일 3만㎡씩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폐수배출시설 공정개선 방안, 업체별 산업폐수 저감계획, 월간 저감실적 제출계획 등을 담은 산업폐수 10%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 폐수 처리기술 향상을 통해 방류수를 농업, 조경, 소방 및 기타 잡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개발, 산업폐수 발생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연말 성과를 분석해 우수업체는 표창키로 했다.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하루평균 33만7천836㎡에 이르고 있다.

4분기 신기술 52개 인정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코오롱건설의 에너지 회수설비를 이용한 2단 역삼투장치등 52개 기술을 4·4분기 신기술(KT마크)로 최종 확정, 인정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은 중소기업이 75%인 39개, 대기업이 25%인 13개 기술이며 건설·환경관련 기술은 영상처리 및 레이저를 이용한 포장도로 노면상태 측정기술, 하수슬러지와 석탄을 혼합한 연료제조기술, 압출성형 무석면 시멘트 문틀재 제조 및 생산기술, 식재블록을 이용한 사면 및 옹벽 녹화기술 등이라고 산기협은 밝혔다.

환경부, 3대강법 시행준비 본격 착수

환경부, 3대강법 시행준비 본격 착수
환경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광결호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3대강법 시행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시행준비에 나섰다. 지난 12월 10일 발표했다.

기획단은 산하에 유역관리 제도팀과 재정기술 지원팀, 행정지원팀, 교육협력팀 등 4개팀과 지방청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 대책팀을 각각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 7월부터 3대강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달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및 수계관리위원회의 규정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어 4월부터 수변구역 지정과 물이용 부담금 등을 결정할 수계관리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수변구역 지정문제와 관련,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지정안을 마련한 뒤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중에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또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에 대해 올 6월과 9월까지 목표수질 설정안 및 기본방침안을 각각 마련하고 시·도 협의를 거쳐 8월과 12월에 각각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 3월중 물이용 부담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3대강법에 앞서 지난 99년 2월 한강법이 공포된 이후 환경부는 지금까지 경기와 강원, 충북 등 한강 수계의 255km²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설정, 음식점과 숙박 업소 등의 신규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